환경보호를 위한 정책·행정 그리고 언론

朴 昌 根
〈(社)環境教育会 会長〉

1.

자연파괴가 환경오염을 확대, 가속화 시키고 환경오염이 또한 자연의 질서와 균형을 철저히 파괴 시킨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다.

즉, 자연의 합리적인 유지는 환경의 상태 여하에 달려 있고, 환경의 실상은 자연의 조건에 결정지어 진다는 이야기다.

이 불변, 분명한 원칙을 외면 내지 오도하고 있는 현재의 한국적 현실은 결국 자연파괴와 환경오염을 동시에 돌이킬 수 없는 상태로 악화시키고 있다는 것을 필자는 지난호, 이 컬럼에서 지적했다.

솔직히 말해 우리나라에는 자연보호를 위한 행정은 있으나 실질적인 자연보호 정책은 없으며, 환경보호를 위한 정책은 있으나 환경보호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행정이 없는 형편이다.

다시 말해 환경정책은 엄연히 존재하고 있으나 그 정책을 행정적으로 유도 시킬 수 있는 조건을 갖추고 있지 못하며, 행정이 있는 자연보

환경칼럼(5)

호의 경우는 총괄적인 정책을 수렴하지 못하고 있다.

즉, 정책은 정책대로 상징적인 품위를 지키고 있고, 행정은 행정대로 계수, 결재 사항으로만 존재하고 있다.

이 한심하고 안타까운 현실에서 우리의 환경은 더욱 빠르게 오염될대로 오염되고, 우리의 자연은 더욱 복잡하게 파괴될대로 파괴되고 있다.

입버릇 처럼, 큰일이다./ 큰일이다./ 말은 하면서도, 보다 효과적이며 바람직한 대책에 대해서는 서로 그 책임을 전가하고, 원인 규명에만 급급해 하고 있다.

자연보호 행정이 통합된 대책으로 환경정책에 귀속되어야 한다면, 마땅히 그리 되도록, 공공력을 동원하든지 아니면, 그런 전제를 제시할 수 있는 다중의 의견을 폭넓게 건의하여야 할 것이다.

즉, 환경, 자연관계의 학자들에게 그 타당성 자료를 제출 받아, 3만 환경인의 연명으로 국가 최고 통치자와 기관에 통합의 절대 필요성을 주지시키라는 것이다.

아니면, 자연보호를 관할하고 있는 내무부에 환경청을 통합시켜, 내무부가 환경보호부적 체계로 환경과 자연보호를 위해 일 하든지…, 양단간에 빠른 통합 대책이 있어야 하겠다.

그렇지 않고, 계속 자연보호는 내무부의 행정으로, 환경보호는 환경청의 정책으로 계수, 계몽, 결재로 이어지면, 결국 피해를 입는 것은, 자연과 환경이며, 백성과 국가일 뿐이다.

필요하다면, 꼭 통합 조정된 기능으로 자연보호와 환경보호를 하나의 맥으로 이끌어야 한다면, 눈치만 보고 있을 것이 아니라…, 말로만 떠들 것이 아니라, 과감하게 행동으로 부딪쳐 달라는 이야기다.

환경청의 경우 내무부에 자연보호 업무를 이관시켜 달라고 눈치만 볼 것이 아니라, 앞서서 자연보호 정책을 폭 넓게 제시하여 실천하면 된다.

즉, 쓰레기 줍기의 정화운동이 아닌 생태학적인 자연보호의 일을 집중적으로 전개하면, 내무부의 자연보호는 단순한 요식행위로 지탱되다가 서서히 맥없이 사그러질 것이다.

아니면, 통합된 대책이 필요하다는 환경인의 서명을 받아, 직접 최고 통치권자에게 호소하는 방법도 있다. 적어도 국무회의나 국회의 결의를 얻어 낼 수도 있다.

적극적으로 생각해 보면 길은 있다. 환경이 보호되어야 자연의 균형이 유지되고, 자연이 보호되어야 환경오염도 쉽게 막을 수 있다면….

그래야 한다면 더 늦기 전에, 적극적인 대책을 실천해야 할 것이다.

2.

대통령 선거를 얼마 남기지 않고 있는 요즈음, 환경 돌아가는 꼴은 매우 답답하고 우울하다.

각 정당의 후보들이 제시하는 정책은 한마디로 핑크빛 무드만 조성하고 있다.

어느 한 사람, 환경보호를 위한 우국 충정이나 국가발전을 위한 환경대책에 대해서는 일언반구도 없다.

모두가 한결같이, 더 잘 살게 될 것이라는 청사진만 꺼내 보이고 있다.

심지어는 어느 후보의 경우 오늘날의 환경을 이만큼이라도 오염시키고, 오늘날의 자연을 이정도만으로도 파괴시키는데 그치도록 공헌한 Green belt정책을, 마치 국민의 불평, 불공정 사항으로 오도하면서, Green belt의 완화 내지, 해제 측면을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다.

심히, 유감이며 우려되는 바다. 이러다가는 더 많은 물자를 위하여, 더 좋은 물건을 위하여, 더 쉬운 물품을 위하여 대기오염이나 수질오염 규제 따위는 백지화시키겠다는 공약이 나올까 겁난다.

들리는 이야기로는 최근 일선 행정기관의 공해 감시, 단속이 완화되고 있다고 한다.

즉, 마땅히 단속해야 할 공해배출을 무슨 까닭인지 외면하고, 심지어는 정기적으로 감시하던 체계도 요즘은 휴무 상태라고 하니….

대통령 선거철이 공해 단속을 완화하는 때로 착각하고 있는 모양이다.

인심도 좋지만, 그로인한 오염의 가중과 가속화할 피해는 어쩌자는 것인지 모르겠다.

최근 구미의 깨인 나라에서는 대통령 선거는 물론 국회의원, 심지어는 지방의 읍장을 뽑는 선거에도 1차적인 공약은 환경보호가 제시 된다.

즉, 잘 산다는 조건이, 옷 잘 입고, 밥 잘 먹는 것에서, 쾌적한 환경에서 사람답게 사는 것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자연보호와 환경보호가 우선하는 정강정책이 호응을 얻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제 올림픽도 치루는 선진 한국이라는 우리네 경우도 잘 먹고, 잘 입게 된다는 비아프라나 방글라데시 식의 정책 보다는 스웨덴이나 캐나다 식의 복지 환경 국가의 흉내는 못 내는지 매우 답답하고 안타깝다.

민주화란 순리로 일을 풀어 나가는 것을 말한다. 순리란 자연의 질서대로 사는 자세요, 그것은 곧 환경보호에서 얻어질 수 있는 것일진데….

말의 성찬 같은 민주화만 내세우고 정작, 그 근간이 되는 자연보호나 환경보호에 대해서 주장하는 후보가 없음은 환경인의 입장으로는 매우 유감스럽다.

정당의 경우도 그렇다. 「민(民)」을 내세우는 정당이라면 여건, 야건 간에 민이 우선 살아가기 위해 절대적으로 필요한 숨쉬는 공기나, 민이 마셔야 되는 물, 그리고 민이 살아가기 위해

얻어야 되는 식품의 토양 쯤은 어떻게 하겠다는 제시가 있어야 할 터인데도 그 후의 일에만 열중하고 있다.

매우 걱정되는 한국의 미래다.

3.

민주주의 국가의 기본적인 성격은 여론의 힘으로 이끌어지는 여론의 국가라고 한다.

즉, 몇 사람의 주장이나 판단으로 좌지 우지되는 나라가 아니라 다수의 의견이 존중되고 지배하는 나라여야 한다고 한다.

그래서 민주주의 국가의 언론은 「자유」, 그것이어야 하며, 폭 넓게 민의를 대변하는 것이어야 한다.

그런 뜻에서, 환경보호 정책과 자연보호 행정을 위한 민의의 언론은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필자가 알기로는 우리나라의 전문지 중에서, 환경과 관련되는 전문지가 그 어느 분야의 전문지 보다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

주간지가 5개에, 월간지가 5개 그리고 격월간, 계간지가 4개 기타를 합쳐 도합 17가지나 된다.

말하자면 환경 전문지 붐 시대라고 할까?

그러나 수적인 면에서는 우세하고 대단하지만 질적인 면에서도 대단하다고 단적으로 말하기는 곤란하다.

극히, 몇개의 매체가 그 본분으로서의 자세를 유지하고 있을 뿐…. 아니 어떤 매체는 환경보호를 위한 매체이기 보다는 영리를, 매체를, 아집을 위한 매체인 경우가 있다.

그리고 한결 같이, 지당론에 치우치고 있음은 매우 안타깝다.

정당한 비판이 정당한 환경보호를 유도한다는 사실로 비추어 볼 때, 환경청 기관지와 같은 자세나, 무조건 까발리고 보자는 자세, 그리고 환경오염과 자연파괴의 근본적인 원인은 외면하고 오직 ppm이나 따지고, 생태계의 한 종에만 집착하는 자세는 이제 버려야 할 것이다.

즉, 하나일 수 밖에 없는 자연과 환경문제를 이원화하고 있는 현재의 국가정책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면, 큰 소리로 그 부당함을 지속적으로 지적해야 하며….

미래의 환경이 걱정되면, 오늘의 대통령 후보의 공약에서 환경보호가 나오도록 깨우쳐야 한다.

그런 큰 일, 용기 있는 일, 환경보호의 일은 외면하고, 대기오염을 줄이기 위해서는 연탄을 어쩌고…, 수질오염을 줄이기 위해서는 세제를 어쩌고…, 떠들어 보았자 한심한 주장만 될 뿐이다.

우선, 정책적으로 행정적으로 틀린 것 부터 바로 잡아야 지엽적인 오염도 잡을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1987. 10. 31)